

경제포커스

■ **혁신중소기업과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최경규(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연구위원)

■ **한국기술평가의 현황**
양동우(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혁신중소기업과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최경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연구위원

gchoi@sdi.re.kr

I. 서론

- 혁신형 중소기업은 기업의 가치 또는 비교우위가 신기술의 채택이나 기존 기술의 혁신적인 적용, 또는 혁신적 경영기법이나 사업 모형으로부터 창출되는 중소기업 또는 기업의 전략차원 중에서 혁신전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을 의미함.
- 정부가 특별히 정의한 혁신 중소기업의 개념은 없으나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가 혁신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는 기술력·혁신역량 등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로 지정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중임.
- 현재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심화와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등 외부 환경변화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성장성, 수익성 저하, 자금난으로 인한 연구개발 투자 부진, 전문인력의 공급부족으로 내부기술 혁신역량이 악화되고 있음.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Stanford University 경영학 박사
-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사업평가팀장 역임
- 중소기업의 ERP 도입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중소기업연구, 2005) 등

- 혁신중소기업은 정보사회, 지식사회에서 필요한 혁신역량을 갖추므로써 미래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기술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 활동에서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 또한 다른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에 자극을 줌으로써 산업전체, 국가전체의 혁신활동을 촉진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짐.
- 이러한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서 들 수 있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는 자금의 조달 문제이며 특히 외부자금 공급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임.
- 기술기반의 혁신 중소기업에 있어서 외부자금 조달 가능성은 창업의 규모에 영향을 주고 창업 규모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므로,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외부자금 조달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해 시장에서 살아남았을 경우 이러한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효과적인 기술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협력을 통해 적절한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연구 개발 활동에의 투자 및 금융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며 연구개발 단계별로 적절하게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술금융 시스템을 확립해야 함.

II.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조달 현황

- 다음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필요자금 대비 자금확보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으며 전체의 25.1%가 필요자금의 50% 이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2005년도 필요자금 확보 정도

(단위: %)

구 분	0~30%	31~50%	51~70%	71~90%	91% 이상
2005년(A)	13.4	11.7	22.7	28.1	24.0
2004년(B)	12.5	15.0	23.4	28.2	20.9
증감(A-B, %p)	0.9	△3.3	△0.7	△0.1	3.1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5.

○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외부 자금은 주로 은행 대출에 의존함(<표 2> 참조).

-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종합보고서」(2004)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외부 자금 차입은 “은행자금” 이 72.2%로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정책자금” 22.7%, “비은행, 즉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 으로부터 조달받는 비율이 2.8%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은행에서 대출되는 은행자금과 정책자금은 물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모두 포함하면 그 비중이 94.9%에 달하며 이러한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83.5%)보다 증가한 것으로 은행 의존율이 매우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표 2> 차입 외부자금의 조달비중

(단위: 금액기준, %)

구 분	은행자금	정책자금	비은행금 용기관자 금	주식	회사채	사채 (私債)	해외자금 차입 등	
중소제조업	72.2	22.7	2.8	0.0	0.3	1.3	0.8	
기업규모	소기업	70.2	23.9	3.7	0.0	0.2	1.4	0.5
	중기업	76.3	20.1	0.8	0.0	0.4	1.0	1.3
산업형태	경공업	71.2	22.6	2.6	0.0	0.6	1.6	1.4
	중화학공업	72.9	22.8	2.9	0.0	0.0	1.0	0.3
판매형태	내수기업	74.1	21.1	3.0	0.0	0.2	1.2	0.4
	수출기업	65.2	28.5	1.9	0.0	0.6	1.6	2.2
기업유형	벤처기업	59.5	34.9	3.5	0.0	0.0	1.3	0.8
	전통제조업	74.2	20.8	2.7	0.0	0.3	1.3	0.8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4.

-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다음의 <표 3>에서처럼 기업유형별로 보았을 때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전통제조업의 경우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1.2%에 그쳤으나 벤처기업의 경우 7.3%로 나타났음.
- 또한 벤처기업은 향후에 직접금융을 이용하겠다는 업체의 비중이 45.5%였던 반면에 전통제조업은 그 절반수준(22.6%)에 그쳤으며 직접 금융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비중 역시 73.5%로 벤처기업의 43.6%에 비해 크게 높음.
- 따라서 기술기반의 혁신 중소기업의 일종인 벤처기업은 무형자산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주식이나 회사채 등 직접 금융 시장을 통한 외부 자금 조달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정책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표 3> 기업 규모와 유형별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단위: %)

구 분		있음	조달코자 했으나 못함	향후 이용할 계획임	관심 없음
중소제조업		2.0	2.8	25.8	69.3
	2004년	2.7	2.7	27.0	67.6
기업규모	소기업	1.8	2.9	24.4	70.9
	중기업	2.6	2.6	29.3	65.5
기업유형	벤처기업	7.3	3.6	45.5	43.6
	전통제조업	1.2	2.7	22.6	73.5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4.

-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규모의 영세성 및 회사채 발행 또는 기업공개 요건 미달 외에도 특히 외부 자금 공급의 불안정성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연구개발을 비롯한 혁신활동 및 기술의 불확실성 및 그에 따른 위험과 수익 예측이 어려워 시장에서 소유주 또는 경영자와 자금 공여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등의 문제로 인해 거래 비용이 과다함.
- 기업의 가치가 주로 과학적 지식이나 지적재산권에 기반을 둔 장기 성장가능성과 연계되며 기술개발부터 상업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long pay back)과 동시에 유형자산을 기반으로 한 담보가 부족함.

- 투자대상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투자위험 대비 수익구조가 열등함.
-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자금 차입 시 대출조건은 “부동산 담보대출” 이 4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기반의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 대출이 어렵다는 점이 외부 자금 조달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며 은행 대출에의 접근을 곤란하게 함(<표 4> 참조).

<표 4> 금융기관 자금 차입시 대출조건

(단위: 금액기준, %)

구 분		부동산 담 보	신 용 보증서	예적금 담 보	연대보증	순수신용	은행지급 보 증
중소제조업		43.3	30.1	7.6	3.0	11.7	4.3
기업규모	소기업	44.5	30.8	7.5	3.6	9.2	4.3
	중기업	40.5	28.4	7.7	1.8	17.3	4.4
산업형태	경공업	48.1	26.9	7.7	3.8	9.8	3.8
	중화학공업	39.9	32.3	7.5	2.5	13.1	4.7
판매형태	내수기업	46.1	30.2	7.6	2.8	9.6	3.7
	수출기업	32.6	29.5	7.7	4.0	19.6	6.7
기업유형	벤처기업	35.2	33.7	9.5	1.2	18.2	2.2
	전통제조업	44.5	29.5	7.3	3.3	10.7	4.6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4.

III. 정부의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1.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 정부는 과거의 요소투입형 성장이 한계를 보이고 성장 잠재력이 약화됨에 따라 중소기업 부문에서의 새로운 성장구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4년부터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함.

- 실태조사에서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새로운 성장원천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과거 주력 상품 또는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혁신형 중소기업은 대부분 차기 상품을 준비하고 있어, 시장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한정화, 2005).
-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방향은 보호육성위주에서 자율경쟁촉진, 직접지원 위주에서 인프라 등 생태계 조성, 공급자 주도형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내수의존형에서 국제화 지향을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전환됨.
-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구분되는 혁신중소기업은 크게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으로 나누어짐.
 - 벤처기업은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및 벤처평가기업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중소기업임.
 - 이노비즈는 기술혁신 능력, 기술사업화 능력, 기술혁신 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등 크게 네가지 분야를 기준으로 선정함.
- 벤처기업과 이노비즈를 포함하여 3만개의 혁신중소기업을 육성하여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을 목표로 삼음.
 - 벤처기업 활성화,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 재정비, 부품소재 중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지원 대책, 대 중소기업간 협력 강화, 중소기업 규제혁신 추진, FTA 추진에 따른 중소기업 대책, 중소기업 지원시책 정비 등 12개 정책과제를 제시함.
-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조세, 창업, 코스닥, 정책자금, 병역특례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함.
 - 구체적으로 법인세·소득세·재산세·증토세 50% 감면, 취득세·등록세 면제하고, 설립자본금을 500만 원으로 낮추고, 교수연구원의 벤처창업 시 3년 이내 휴직 허용하며, 융자자금(중산기금) 심사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우대 등임.

<표 5> 현행 벤처기업과 이노비즈에 대한 특례지원제도

구 분	벤처기업	Inno-Biz
지 원 내 용	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중소기업 일반 세제혜택* 이외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확인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창업에도 지원 	○ 창업중소기업 일반 세제혜택* 이외에 Inno-biz기업에 추가혜택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중소기업 일반 세제혜택(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창업기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소득발생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감면 · 사업용재산(창업후 5년 보유) 재산세 50%감면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자본금 5백만 원 이상 ○ 교수, 연구원의 벤처창업시 3년이내 휴직 	○ 없음
	코스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시 우대(벤처기업부 별도운영) 	○ 없음
	상법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출자, 유한회사 설립, 주식교환, 스톡 옵션 부여 대상 등 예외 인정 	○ 없음
	신용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우대(85% 고정) ○ 보증한도 50억(일반 30억) 	○ 보증비율 우대(85% 고정) ○ 보증한도 50억(일반 30억)
	정책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자금 심사우대(가점3점) 	○ 융자자금 심사우대(가점3점) ○ 기술혁신개발자금 우대(가점3점) ○ 해외유명규격인증 우대(가점2점)
	특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심사 대상 	○ 우선심사 대상
	병역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기업 신청 연간 2회(일반 1회) 	○ 지정기업 추천시 우대 (5-6점 가점)
	방송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라디오 광고비 70% 할인 	○ 없음

자료: 산업자원부, 2006.

- 이노비즈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이노비즈를 선정, 정책자금지원, 투자펀드조성 및 경영 컨설팅과 해외인증 획득지원 및 판로개척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세계적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육성시키는 것임.
 - 지원시책으로 기술신보 보증지원(100% 전액보증), 14개 이노비즈 금융지원협약은행의 신용여신지원,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신청시 우대, 중소기업청 지원시책 종합 연계지원에서 우대, 이노비즈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지원, 조달청 구매시 우대,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특허청 특허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등이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이노비즈 지원정책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의 연장선상에 포함돼 이루어지고 있어서 혁신중소기업에게 자율적으로 혁신적 의지를 갖고 움직이도록 하는 유인이 미흡하며, 혁신중소기업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방안이 필요함.

2. 서울시의 지원정책

1) 중소기업육성자금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통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고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해 업체의 경영안정과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서울시 전략산업 등 시책사업을 지원함.
 - 그동안 조성한 기금은 2005년까지 1조 1,901억 원에 달하고 총 53,437개 업체에 대해 4조 705억 원의 지원실적이 있음(<표 6>과 <표 7> 참조).

<표 6> 지원실적 (1965~2005)

구분	업체 수(개)	금액(억 원)
합계	53,437	40,705
경영안정자금	46,973	21,907
시설자금	6,464	18,798

자료: 서울시, 2006.

〈표 7〉 최근 5년간 지원(추천)실적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업체 수(개)	984	2,742	1,785	7,629	7,367	27,458
금액(억 원)	2,605	4,375	3,731	5,265	6,553	9,480

자료: 서울시, 2006.

- 2006년의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 4,200억 원(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시설자금 3,200억 원)과 시중은행협력자금 2,500~3,000억 원(경영안정자금)의 최대 7,200억 원의 융자지원을 계획해 시행중임¹⁾.
 - 경영지원자금은 업체당 최고 5억 원, 시설자금은 최고 100억 원 규모임.
 - 대출금리는 연 4.0~4.5%로 시중금리보다 2~3% 낮으며, 시중은행협력자금은 은행책정금리에서 2.0%를 보전해 줌.
 -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이 8~15년 상환(3~5년 거치, 5~10년 균등분할상환), 경영안정자금은 5년 상환(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임.

2) 신용보증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용보증을 지원함.
- 2005년 보증잔액기준으로 41,692개 업체에 7,984억 원을 지원했고, 보증공급은 28,517개 업체에 4,856억 원임. 2006년도는 3,600억 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할 예정임(〈표 8〉 참조).
 - 운전자금은 연매출액 기준으로 벤처기업은 1/3, 제조업 1/4, 기타업종 1/6 이내에서 보증하고, 시설자금은 해당시설 소요자금의 90% 이내에서 보증함. 동일기업당 4억 한도임(단, 3,000만 원 이하는 매출과 관계없이 보증지원 가능함).
 -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5~2.0%(기준보증료 연 1%)이고 보증기간은 대출기간과 일치함.

1)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에게 장기저리의 금융혜택을 주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고, 시설자금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나 정보화 목적의 신규 설비를 도입하려 하거나 공장 및 사업장을 임차, 구입, 건축하려 할 경우 소요되는 금융비용을 줄여 주기 위한 제도임.

〈표 8〉 연도별 신용지원실적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보증	업체수(개)	1,809	4,257	7,622	12,439	11,534	28,517
공급	금액(억 원)	1,522	2,510	2,609	3,379	3,179	4,856
보증	업체수(개)	1,943	5,074	10,064	16,217	20,487	41,692
잔액	금액(억 원)	1,547	2,880	3,740	4,606	5,405	7,984

자료: 서울시, 2006.

3) 기타 지원

- 서울시무역진흥사업으로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해외 판로개척 확대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기술 보유 유망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본 유치 및 선진기술 도입을 지원함.
 - 해외 유명 전시회 대규모 단체 참가 및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일부 지원(업체당 500~700만 원 한도), 전시회 참가 전 프리마케팅 및 참가 후 사후관리 지원으로 계약성사율을 제고함.
 - 현지 기업(바이어·투자자) 사전 섭외를 통한 일대일 상담회 개최, 프리마케팅 강화 및 일정기간 사후관리 지원으로 계약 성사율 제고, 행사장 임차 설치 운영, 개별통역 제공, 공동 홍보물 제작 배포 등 공통경비를 지원함.
 - 인터넷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의 효율적 해외마케팅과 정보화 인터넷무역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능력을 배양함.
- *Hi Seoul* 브랜드 마케팅으로 공동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외 판로개척을 활성화하고, 도시마케팅 활동과 연계하여 “*Hi Seoul*” 브랜드 파워 강화를 통한 도시이미지 홍보를 측면 지원함.
 - 패션제품군, 정보통신제품군, 문화콘텐츠제품군, 생활용품 등 소비재상품 위주로 설립 후 2년 이상 경과한 서울시 우수기업에 대해 *Hi Seoul* 브랜드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외 전시회, 투자유치상담회, 시장개척단 등 해외 판로 개척 사절단 참가 지원, 해외인증획득, 지사화사업 및 인터넷무역사업 참가 지원, 공동전시판매장 개설 지

- 원, 전문유통기업 협력사업 지원 등 마케팅지원을 함.
- 해외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증이 없어 해외시장 개척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전문기관과 연계, 해당 인증 획득을 위한 절차 자문 및 비용 등을 지원함.
 - *Hi Seoul* 브랜드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함.
 - 지원 대상 인증은 CE(유럽), UL(미국), FDA(미국), JIS(일본) 등의 제품 대상 인증
 - 서울의 특성에 맞고 서울이 지니고 있는 산업여건에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지식 기반형 산업인 서울형신산업을 육성지원함.
 - “서울산업진흥대책위원회”에서 전자 정보통신사업, 소프트웨어산업, 패션디자인산업, 애니메이션 캐릭터산업, 멀티미디어콘텐츠산업 등으로 분류해 서울패션디자인센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등을 통해 지원함.
 - 신기술창업센터, 자치구창업지원센터, 서울인쇄센터, 서울벤처타운,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사정이 열악한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범용기기 및 작업장 제공, 기술 및 경영지도, 자금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

IV. 혁신중소기업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

1. 벤처 및 이노비즈의 창업 및 육성 지원

- 혁신형 기업의 창업은 그 속성상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중요하며, 기술사업화 초기단계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를 실시하는 기술사업화전문투자펀드 조성,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개발기술사업화(R&BD)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화자금의 실질적 역할을 위한 증액 및 기간연장 등이 필요함.
-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정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도 중요하나, 기술개발, 생산, 자금, 마케팅 등 중소기업의 가치사슬 단계별 혁신을 위한 지원도 중요함.
 - 정책자금 및 산업은행 자금지원 시 혁신형 기업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혁

신형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하는 과제를 따로 설정하는 등 중소기업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중소기업의 혁신형 기업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혁신형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정책이 요구됨.
 - 용자 위주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방식을 개편해 모태펀드조성, 창업초기 혁신형 기업 투자 확대, 보증과 연계한 투자제도 등 혁신형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이 중요함.
-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비율과 보증비용을 우대해주고 평가결과에 따라 연대보증 등 보증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보증공급확대 및 개선이 필요함.
 - 보증이 약 95%를 차지하는데 비해 혁신형 기업에 대한 보증전담기관인 기술보증의 보증비율은 60% 수준으로 낮은 편임.
 - 기술평가와 보증지원기능을 결합해 담보력은 약하지만 기술력은 우수한 기업에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술력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 개발, 보증에 있어서 기술평가 결과 활용 등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기술평가 시장 활성화가 병행되어야 함.
- 혁신형 중소기업은 기술력은 높지만 재무상황이 취약해 코스닥 상장이 어렵고, 그 결과 추가 자금조달과 지속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코스닥 상장 심사시 기술력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수익성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해 주는 방안이 필요함.
 - 혁신형 중소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확대하고 사모투자펀드의 규제완화로 M&A, 세컨더리마켓 등의 다른 회수수단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에 비해 R&D는 총연구개발비의 24%에 불과하여 대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제도 도입이 필요함.
 - 중대형 과제 선정 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우대하여 중장기 대형 R&D사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단기 소형 R&D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신규참여 기회를 확대함.
 - 정부 R&D사업에 참가기회를 얻음으로써 수요기업과의 거래계약 체결이나 더 나아가서는 공동연구 혹은 공동사업 체결에 필요한 인지도 및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음.

2. 성과공유제의 활성화

-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는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이 공동의 혁신활동으로 원가절감, 품질향상 및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상호 공유하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제도임(산업자원부, 2006).
 - 성과공유제는 ① 공급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②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창출하여 ③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상생협력 시스템으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성과의 공유를 통해 가치 지향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함(김경목, 2006).
- 성과 공유제의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은 다음과 같음.
 - 산업자원부의 경우 지방설명회와 일본, 미국 등을 벤치마킹함으로써 확산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한국전력의 시범사업(2005.11~2006.4)이 끝나는 대로 성과와 애로요인 등을 파악하여 다른 공기업에의 확산방안도 모색할 계획임.
 - 한국생산성본부의 경우 2005년 6월에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를 설치하였으며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를 매월 개최하는 등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노력을 실행중임.
- 국내 기업들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기업 22개사 및 협력 중소기업 146개사를 대상으로 2006년도에 수행된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으로 대중소기업 모두 ‘대기업이 협력기업에 보상한 성과보상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우선순위로 꼽았으며(대기업: 72.7%, 중소기업: 77.4%), 중소기업들은 성과공유제 도입 과정에서 구매물량 확대(82.7%), 신규사업 참여 우선권 부여(80.0%), 후한 단가결정(61.3%), 거래기간 연장(48.0%), 기술지원(42.7%) 등 대기업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의 경우 성과 공유제 도입 기업체수는 12개 기업(54.5%)으로 나타났으며 6개 기업은 향후 도입의향을 밝혔고 현재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성과공유 방법은 제안제도(83.3%), 공급사개발(33.3%), 목표원가법(16.7%) 등으로 나타났음.
 - 대기업의 입장에서 성과공유제 활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으로 제안될 수 있는 것은 세제지원(72.7%)이나 장기 저리 융자(54.5%), 협력관련 제도에 대한 규제완화(50.0%),

성과공유모델의 보급(45.5%) 등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바라는 성과공유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의 지원책으로는 대기업의 구매물량 확대(82.7%), 신규사업 참여 우선권 부여(80.0%), 후한 단가 결정 (61.3%), 거래기간 연장(48.0%), 기술 지원(42.7%) 등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세제지원 (77.3%) 및 장기 저리 융자(34.7%), 협력관련 제도에 대한 규제완화(32.0%) 등이 주요하게 요구되는 정부의 지원책으로서 나타남.

3. 기업벤처캐피탈의 활성화

- 기업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이란 대기업이 전략적으로 혁신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금융 중개기관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설립한 자회사 형태의 투자회사를 말함.
- 기업벤처캐피탈의 경우 투자대상은 주로 기술력은 있으나 경영능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일반 벤처캐피탈과는 달리 투자자인 수요기업이 자본 수익 외에 투자회사의 기술지도, 생산 및 경영 관리를 지원하고 따라서 기술기반 중소기업과의 장기적인 견고한 제휴관계의 형성이 가능함.
 - 대기업과 기술기반 중소기업 간의 가치사슬을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에 있어서 수요 대기업은 자사의 기업벤처캐피탈(CVC)을 설립하여 지분을 출자하고, 이 펀드를 통해서 협력업체인 혁신 중소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직접적인 상생의 구조를 확립할 수 있음(서울대학교, 2005).
 - 이러한 기업벤처캐피탈을 통해서 대기업은 1차적으로는 최신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하며 단기적인 이득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정부는 정책적으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술기반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동 주관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가 출범시킨 모태펀드에 공개적으로 입찰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 및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펀드의 운영을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아닌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대기업의 기업벤처캐피탈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모니터링 부담을 감소시키고 동

시에 기업의 펀드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4. 가치사슬 단계별 지원

-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술개발, 상용화, 마케팅 등의 가치사슬 상에서 단계에 따른 혁신 지원방안이 매우 중요함.
- 중소기업의 R&D 비용은 대기업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작으므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68%의 혁신형 기업이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고 그 중 35.5%가 서울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혁신형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기술금융 정책이 시급함.

<표 9> 연도별 신용지원실적

구분	서울	경기,인천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울산	경남	기타	계
업체 수(개)	4,529	4,122	926	951	606	490	1,121	12,745
비율(%)	35.5	32.3	7.3	7.5	4.8	3.8	8.8	100.0

자료: 서울시, 2006.

- 정부는 기술개발자금 지원시 중소기업의 가치사슬 상의 위상을 고려해 유형별로 차별화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산업자원부(2006)는 기술혁신 전략과제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주로 운영하되 기술혁신 일반과제는 소규모 기업 및 예비 이노비즈 기업을 위주로 운영하여 혁신형 기업의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혁신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함.

V. 결론

- 현재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 시행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혁신형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제는 아직 미흡함.

- 혁신 활동의 중심이 되는 기술기반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경우 혁신 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그러나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외부자금 조달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은 국가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함.
- 효과적인 기술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협력을 통해 적절한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연구개발 활동에의 투자 및 금융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며 연구개발 단계별로 적절하게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술금융 시스템을 확립해야 함.
- 이러한 정책방안으로서 가치사슬에 기반을 둔 시스템을 바탕으로 혁신 중소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대안으로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촉진 및 보증공급 확대 및 개선을 강조하고 성과공유제 및 기업벤처캐피탈의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의 유형별 차별화 방안을 제안함.
- 나아가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서 적절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 중개기관의 역할, 그리고 법적인 규제 및 제도에 대해서는 보완되어야 하며 서울시 기술금융 정책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후 연구가 필요함.

참고문헌

- 김갑수(2001), 부품소재분야 민간기술개발공동체 형성전략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
- 김경묵(2006), 성과공유제의 올바른 이해, 제2차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
- 김영배(2005), 혁신형 중소기업: 기업특성, 기술학습과 경영성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산업자원부(2006), 혁신형중소기업 육성방안, 혁신형중소기업 육성 관계기관회의 보고자료
- 서울대학교(2005),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사업 최종보고서, 산업자원부
- 서울특별시(2006), 2006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계획
- 전국경제인연합회(2005), 기업의 대 중소기업 협력실태와 시사점, FKI Issue paper

- 중소기업청 (2005), 중소 벤처기업의 활력제고(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육성)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4), 2004년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종합보고서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5), 중소기업현황
- 한정화 (2005), 중소기업과 시장 및 정부,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발표자료
- 함준호, 강종구, “중소기업 금융과 은행의 역할 : 혁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경제 분석 제 11권 제 3호 (2005, III)